

2026년,  
한국경제 **大**도약의 원년

-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업무보고 -

2025. 12. 11.

# 목 차

## ● 기획재정부

I. '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추진방향

II. 중점 추진과제

## ● 국세청

## ● 관세청

## ● 조달청

# I. '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추진방향

# 1. 새정부 출범 이후 정책대응

출범 첫 날(6.4일)부터 비상경제점검TF 가동,  
2차 추경, 성장전략 등 정책 릴레이



경제회복 + 성장 모멘텀 마련



6월

대통령 주재  
1차 비경



7월

최단기  
2차 추경



8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10월

관세협상  
타결



12월

세제  
정상화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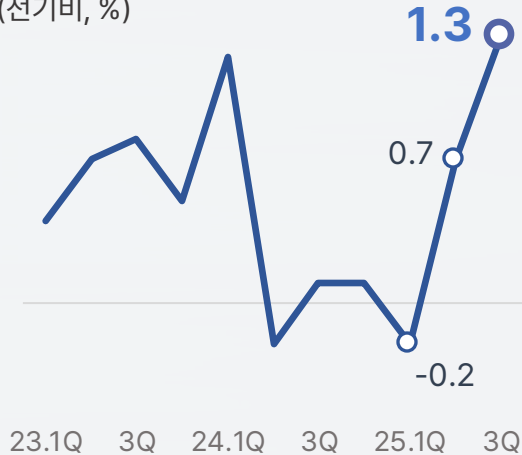
헌법시한내  
'26년 예산

## 2. 주요 경제 성과

### 경기 반등

[경제성장률]

(전기비, %)



**3분기 1.3% 성장**  
**15분기 만에 최고**

### 증시 사상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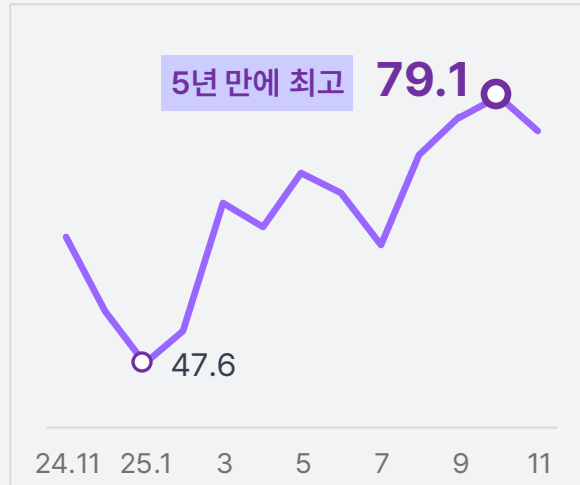
[코스피 지수]



**코스피**  
**사상 첫 4,000 돌파**

### 민생 회복

[소상공인 체감 BSI]



**소상공인 체감경기**  
**5년 만에 최고수준**

# 3. '26년 대내외 경제여건

## 주요국 확장재정

(EU) 국방비 예산 대폭 증액(獨 +32%)  
(미국) OBBBA 감세법안 통과

## 글로벌 AI 투자 확대로 韓 반도체 수출 호조 전망

美 빅테크 자본지출 증가율 전망  
(%, 전년비, '25.8→11월 )

'24	'25°	'26°
55	55→60	19→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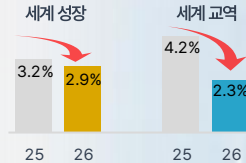
**기회**

국내 소비·투자 등  
내수회복 가속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계기  
외국인 투자 확대 가능성

## 관세영향 본격화로 세계 경제 성장· 교역 둔화 전망

[OECD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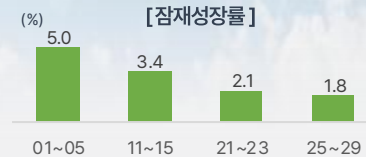


**도전**

주요 이벤트 계기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26.5월 연준 의장 교체  
'26.11월 美 중간선거

국내 잠재성장률 하락, 양극화 구조,  
외환·부동산시장 잠재 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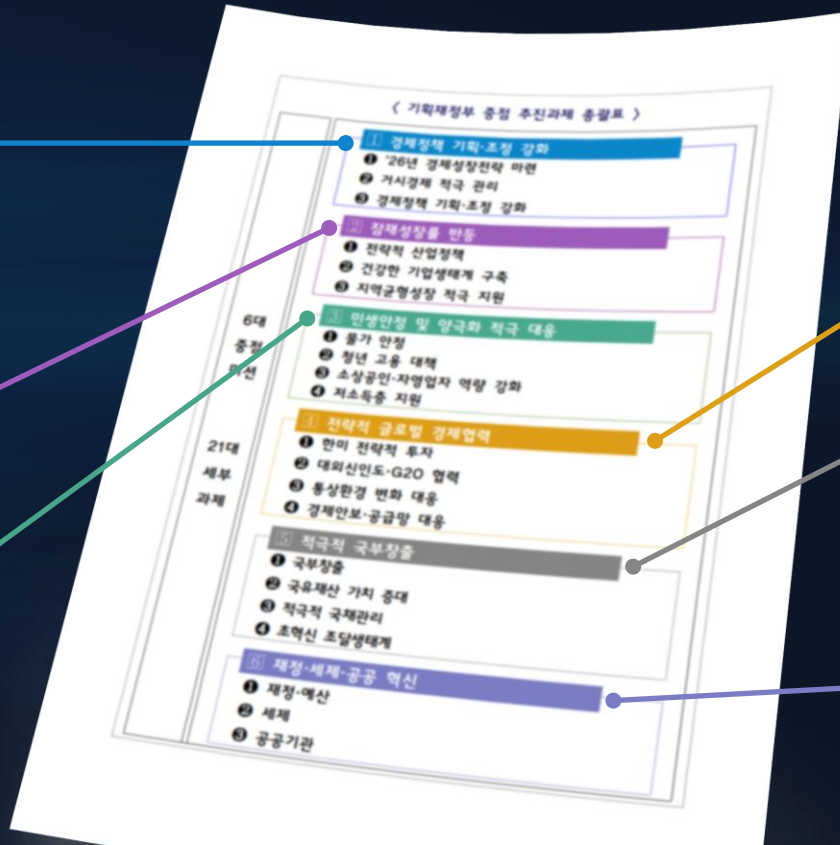
# 4. 향후 정책방향

## '26년을 “한국경제 大도약 원년”으로

01  
경제정책  
기획·조정  
강화

02  
잠재성장률  
반등

03  
민생안정 및  
양극화  
적극 대응



04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

05  
적극적  
국부 창출

06  
재정·세제  
·공공 혁신

## Ⅱ. 중점 추진과제

# 1. 경제정책 기획·조정 강화 : 근본적 경제·구조 혁신 + 선제적 현안 대응

## '26년 경제성장전략 마련

– 1월중, 관계부처 합동



이재명 13분

<2026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3/4분기 국내총생산(GDP) 1.2% 성장과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은 주가지수 상승률 기록, 우리 정부가 받아 든 첫 번째 '경제 성적표'입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의 작은 불씨를 활활 지펴, 잠재성장률 반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대내외 불확실성의 파도에 맞서기 위해 경제 기초 체력을 더욱 견고히 다지고,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한 특정한 토대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하려 합니다. 거시경제-민생 안정,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구조 극복, 지속 성장 기반 강화까지 총 4대 분야 핵심과제와 세부과제를 담아낼 계획입니다.

실현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실질적 정책을 수립하고, 부족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하며 완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과 지속적 성장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철저히,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안)

I 거시경제-민생 안정	
1 경기 활성화	① 적극적 거시경제정책, ②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성화
2 민생 안정	③ 식품산업 경쟁력진, 유통구조 개선 등 유통안정, ④ 소상공인 생산성 제고, ⑤ 시민 생계비 절감
3 리스크 관리	⑥ 주택금융 가속화 등 부동산시장 안정, ⑦ 스태터블코인 규제완화 마련 등
II 성장동력 확충(기술선도 성장)	
4 국가전략산업 육성	⑧ K-반도체 육성, ⑨ 방산 4대 강국 도약, ⑩ 게임·푸드·뷰티 등 K-컬처 육성, ⑪ 석화·활강 등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5 경제혁신 본격화	⑫ AI 대안 및 초혁신경제 본격 추진, ⑬ R&D 혁신, ⑭ 탄소중립·에너지전환
6 새로운 경제전략 추진	⑮ 플랫폼 융합형 우주주거, ⑯ 수송시장 다변화, ⑰ 공급망 강화
7 인적자본 확대	⑱ 청년·중장년 교육육성, ⑳ 제도적·재기지원, ㉑ 기술인력 양성·고용교육 혁신, ㉒ 저출생 대응, ㉓ 외국인력 전략적 활용
III 양극화 구조 극복(모두의 공정한 성장)	
8 지역균형성장	㉔ 지역 산업·인프라 육성, ㉕ 지방 유대, ㉖ 지역균형 촉진, ㉗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9 대·중·소기업 상생 및 중소기업 성장지원	㉘ 대·중·소기업 지식·기술협력, ㉙ 기술협력 발전, ㉚ 중소기업 글로벌진출 등 경쟁력 제고
10 신산업인프라 확대	㉛ 민간투자 금융지원·인센티브 확대, ㉜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 등
11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㉝ 임금격차 완화, ㉞ 비정규근로자 보호, ㉟ 개정 노조법 원활한 시행
12 사회안전망트 강화	㊱ 사회금융지원 확대, ㊲ 퇴직연금 기금화 등 노후소득보장, ㊳ 기초생보 확대 등 저소득층 지원
IV 지속성장 기반강화	
13 생산적 금융	㊴ 벤처투자 확대, ㊵ 개인·국내주식 장기투자 및 금융회사의 기업자금공급 촉진, ㊶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및 WGBI 편입 준비, ㊷ 첨단산업 금융지원
14 규제개혁	㊸ 데이터 공유 확대, ㊹ 기업규제별 규제 개선, ㊺ 정책행위 합리화
15 재정·공공기관 혁신	㊻ 재정운용방식 및 지출구조 혁신, ㊼ 고용·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재정안정, ㊽ 조세배분 및 국제회 수입 관리, ㊾ 공공기업 혁신, ㊿ 국제재산 제도개선, ① 조달행위 경쟁 제고 및 혁신소달 확대

## 거시경제 적극 관리

### 경기 활성화

“1.8%+α 성장”

- 적극적 재정정책 (총지출 +8.1%)
- 소비·투자·수출 부문별 활성화 대책

### 잠재 리스크 관리

- 외환
- 부동산
- 점검 체계

적기 시장대응조치 실행 + 구조적 수급 불균형 해소

주택공급 촉진 방안 마련

매주 장·차관급 시장상황점검회의 → 거시경제, 금융외환시장 등상시점검

## 경제정책 기획·조정 강화

### 경제정책 기획·조정

- 부처간 협업 플랫폼 강화, 단기현안 선제·적극 대응
- 전략적 수출 지원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 신산업
- 일자리혁신
- 인력양성
- 6대 구조개혁\*
- 지역균형발전
- 경제안보
- 양극화대응
- 데이터경제

\*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국책연구기관 협업 강화해  
근본적 구조개혁 과제 발굴

## 2. 잠재성장률 반등 : 산업 대전환 + 상생·지역균형 성장

### 전략적 산업정책

AX

- ✓ AI 대전환(피지컬 AI) 본격 추진
- ✓ R&D·실증·금융·규제완화 등 전방위적 지원

GX

- ✓ K-GX 전략 수립('26.上)
- ✓ 민관합동 K-GX 추진단 가동

### 초혁신경제

- ✓ 차세대 전력반도체, 산·학·연·병 거점 선정 (AI바이오), K-푸드, K-뷰티 등 성과 가시화
- ✓ 민관합동 추진단 지속 운영

국정과제 33

### 건강한 기업생태계 구축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  
(지방투자연계 지주회사특례)

기업규모별 규제와  
경제형별 합리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26.1분기)

고부가 서비스 육성  
(관광, 콘텐츠, 데이터 등)

국정과제 53

### 지역균형성장 적극 지원

5극3특 성장엔진 및  
메가특구 집중지원

지방우대 재정·세제, 농어촌 기본소득 정착  
및 재정의 지역 자율성 강화

# 3. 민생안정 및 양극화 적극 대응 : **취약부문** 촘촘 지원 + 근본적 **역량강화**

국정과제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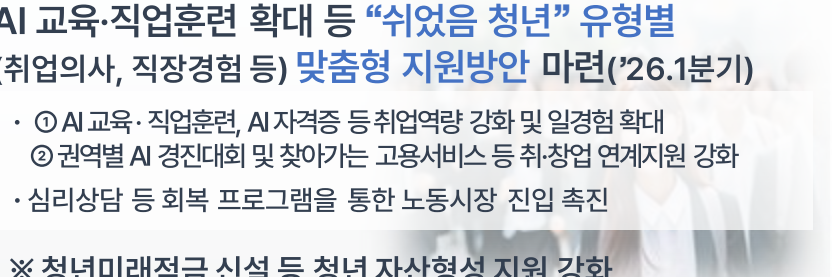
## 물가 안정

- ✓ **물가관리체계 강화**
  - 각 부처 차관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
  - 공공요금·수수료 관리체계 보완 등
- ✓ **먹거리, 석유류 등 생활물가 안정**
- ✓ **식비, 에너지, 교통·통신비 지원 확대**



## 청년 고용 대책

- ✓ **AI 교육·직업훈련 확대 등 “쉬었음 청년” 유형별 (취업의사, 직장경험 등)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26.1분기)**
    - ① AI 교육·직업훈련, AI자격증 등 취업역량 강화 및 일경험 확대
    - ② 권역별 AI 경진대회 및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등 취·창업 연계지원 강화
    - 심리상담 등 회복 프로그램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
- ※ 청년미래적금 신설 등 청년 자산형성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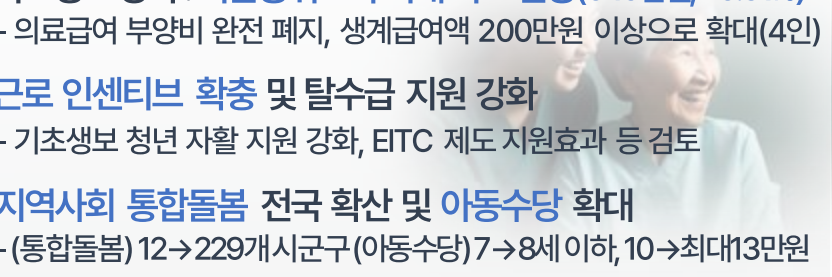
##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 ✓ **AI 활용 지원 등 업종별 생산성 제고**
- ✓ **지역사랑상품권('26년, 24조원) 국비보조를 상향 등 매출기반 확대**
- ✓ **바우처 지급, 채무조정 등 부담경감**



## 저소득층 지원

- ✓ **기초생보 강화: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고 인상(649만원, +6.51%)**
  - 의료급여 부양비 완전 폐지, 생계급여액 200만원 이상으로 확대(4인)
- ✓ **근로 인센티브 확충 및 탈수급 지원 강화**
  - 기초생보 청년 자활 지원 강화, EITC 제도 지원효과 등 검토
- ✓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확산 및 아동수당 확대**
  - (통합돌봄) 12→229개시군구(아동수당) 7→8세 이하, 10→최대13만원



# 4.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 : 전략투자 기반 마련 + 경제안보 리스크 선제 대응

## 한미 전략적 투자

- ☑ 한미 전략투자공사/기금 설립 : 중층적 의사결정, 시장영향 최소화
- ☑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 사업 선정 : 기업과 소통 + 양국 Win-W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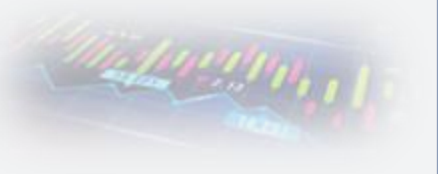
## 대외신인도 · G20 협력

- ☑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지속 및 외화 외평채('26년 50억불, 역대 최대 수준) 발행  
\* MSCI 종합로드맵, WGBI 편입 자금 지원
- ☑ 경제·금융 중심 G20<sup>'26美의장국</sup> 운영 대응 : '28년 의장국 수임 대비



## 통상환경 변화 대응

- ☑ 경제+외교+안보+문화 → 「新대외경제전략」 마련
- ☑ 전략수출금융기금(가칭) 신설  
→ 대규모 수주 지원과 이익공유 체계 마련



## 경제안보 공급망 대응

- ☑ 대통령 주재 '경제안보점검회의' 신설 : 행정부 내에 효율적 경제안보 대응 체계 구축
- ☑ 민간·전문가·부처 협업 통한 공급망 위기에방 및 대응

↑ 「경제안보공급망지원법」 + 공급망안정화委



# 5. 적극적 국부 창출 : 국유재산·국채관리·조달 **순** 과정에 국부증진

## 국부 창출

- ✓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추진('26.上)  
- 테마섹(상), Future Fund(호) 등 해외사례 벤치마크
- ✓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증식  
→ 미래세대로 이전

## 국유재산 가치 증대

- ✓ 매각시 제값 받고 처분  
+ 양질의 국유재산 보유·활용 → 가치 극대화
- ✓ AI·신재생에너지 등 전략산업, 공공주택  
공급 등 적극 활용을 통한 공익가치 제고

## 적극적 국채 관리

- ✓ 외국인·개인 등 수요저변 확대,  
국고채·공사채·보증채 발행시기 조절
- ✓ 장·단기 국채발행 비중 조정,  
잔존만기 관리 강화 → 이자비용절감

## 초혁신 조달 생태계

- ✓ 신산업 혁신제품 5천개로 확대,  
AI 제품 진입장벽 최소화
-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으로  
혁신기업의 Scale-UP 지원



# 6. 재정·세제·공공 혁신 : 재정전반의 효율성·투명성·정책지원 기능 극대화

국정과제 17

## 재정·예산



### 재정·예산 혁신

- ✓ 예산의 전략적 자원배분 강화 (재정전략회의 조기개최)
- ✓ 모든 예산사업 원점 재검토
- ✓ 성과평가 : 민간전문가 중심 전환

### 재정 투명성·책임성

- ✓ 예산 편성 과정 국민 참여 확대
- ✓ 예·결산 정보 전면 공개 (예산사업 설명자료 등)
- ✓ 민간전문가·지방공무원 교육 강화

## 세제



- ✓ 생산적 부문으로 자본 이동 유도
  - 주식 장기투자(개별종목/통합상품) 촉진
  - 기업성장펀드 등 벤처·혁신자본 지원
- ✓ 글로벌 기술경쟁 뒷받침
  -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추진
  -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지원 강화
- ✓ 적극재정 위한 세입기반 확충
  - 비과세·감면 정비(조세지출 전수분석 등)
  - 글로벌 최저한세 등 차질없는 과세

국정과제 18

## 공공기관



- ✓ 공공기관 초혁신 성과 극대화
  - AI 적극 활용 등 공기업 초혁신 프로젝트(62개) 추진
  - 집행·전달체계 혁신 등 운영 효율화
- ✓ 안전관리 책임성 강화
- ✓ 유사·중복 기능조정 등 본격 추진
  - 부채·부실 투자 누적 기관 전면 혁신 등
- ✓ 책임·성과 기반 관리체계 재편

**국세청 · 관세청 · 조달청  
업무보고**

# 국세청 업무보고

'26년  
업무추진 방향

국민주권정부 첫 해, 새 정부 국정철학을 국세행정에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와 시스템 정비  
»» 2년차에는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세수관리 · 납세서비스 혁신 · 조세정의 구현**에 박차

## 1 국정운영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최선의 노력

- '26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381.8조원 ('25년 추경대비 +19.2조원 증가)
- 성실신고 지원 및 체납징수 강화로 세수확보에 총력

## 2 국세 체납관리의 전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 체납관리단 출범 : 현장중심의 능동적 · 적극적 체납관리로 전환
-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경제적 재기 지원(납부의무 면제, 지자체 복지서비스 연계 등)
- 악의적 고액 · 상습 체납자는 특별기동반 · 추적전담반 운영으로 강력대응

## 3 AI 3대 강국을 선도하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 납세서비스 혁신, 공정과세 구현, 세정효율화 등 세정 프로세스 전면 혁신
- ('25) ISP 수립, ('26) 예타 · ISMP 수립, ('27) 본사업 착수, ('28) 개통
- 국세청 독자 인프라 · 생성형 AI 도입, 전담부서 운영 · 전문인력 양성

## 4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

- 세무조사 부담 완화(정기조사 시기선택제 시행, 안내중심 조사진행)
-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환경 조성(중소상공인신산업 세정지원), 국세데이터 개방
- 국민중심의 합리적 세법해석으로 취약계층의 과중한 세부담 해소

## 5 반사회적 탈세 척결로 조세정의 구현

- 서민대상 불법 · 불공정행위(폭리 취하며 물가인상하는 생활밀접업종, 임금체불 사업자 등)
- 주가조작, 변칙 상속 · 증여, 가상자산 활용한 지능적 역외탈세
- 시장교란 부동산 탈세, 기부문화 저해하는 불성실 공익법인

## 6 재정누수를 차단하는 빈틈없는 세원관리

- 조세지출 집행 현황 점검, 공제 · 감면 악용사례 차단
- 가상자산 탈세 대응(전담조직 신설, 거래추적 프로그램 개발, 암호화자산 정보교환 준비)
- 고액소송 대응역량 강화로 과세권 수호(대리인 공개경쟁방식 도입 및 성공보수 대폭 상향)

## 7 실용적 세정외교로 진출기업 지원 및 국내투자촉진

- 이중과세 해소(양자교류 · 다자회의체 참여로 공조강화, 전략적 APA 실시)
- 주요 수출시장 · 교민 보호 필요성이 큰 지역에 국세관 신설
- 재외국민 국내복귀(U-turn) 지원 및 외국계 기업 국내투자 유치

# 관세청 업무보고

## 2026 업무추진방향 : AI 혁신으로 미래형 관세행정 구현 → 수출산업 지원 및 국민건강·사회안전 수호

자체 추진

### 수출기업의 新 통상질서 대응 지원

#### ▶ 원산지 관리·검증 중심 美 관세협상 이행 지원

- 한-미 비특혜 원산지 실무협의체 구성
- 美 원산지 판정·관세율 품목번호 정보 제공
- 반도체, 조선업 등 산업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세·물류제도 혁신

#### ▶ EU CBAM 대비 탄소배출 관리 프레임워크 협의 추진

- EU 관계당국, 국내 관계부처 협업 강화
- CBAM 전담 통관어로 해소팀 운영
- 탄소배출 관리 프로그램(CBAM-PASS) 개발·무료보급

국정과제 37

### 무역안보 침해·초국가범죄 엄정대응

#### ▶ 무역안보 침해행위 대응기반 마련

- 무역안보 침해\* 대응 전담 수사체계 구축
-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 \* 국산둔갑 우회수출, 우회덤핑, 전략물자 반출 등

#### ▶ 초국가범죄에 사용되는 자금고리 원천 봉쇄

- 가상자산 악용 자금세탁 등 범죄자금 유통 모니터링 강화
- 무역거래 파생 범죄(보조금 편취, 해외 재산은닉, 기업가치 왜곡 등) 수사 책임성 제고

국정과제 37

### 마약, 총기류의 국내반입 원천차단

#### ▶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새로운 단속체계 구축

- 마약 전과자·투약자 정보를 활용한 정보분석 고도화
- 국제공조로 마약차단막을 해외까지 확대
- 국경단계 통관검사 + 마약수사 일체화

#### ▶ 국경단계에서 총기류 등 국민안전 위협요소 차단

- 관계기관 간 총기·탄환류, 사제총기 부품 등 테러물품 차단 공조
- 데이터 기반 통합국경관리를 위한 '범부처 위협정보 공유체계' 설계

국정과제 37,24

### AI 등 환경변화에 최적화된 업무체계 구축

#### ▶ 역직구 수출 활성화, 직구 안전성·편리성 향상

- '對 일본 해상 간이통관 제도' 등 역직구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시행
-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 개통
- 해외직구 반품·환급절차 간소화

#### ▶ 관세행정 AI 대전환 본격 추진

- 수출입 안전관리 업무를 우선으로 관세행정 AI 모델 단계적 개발
- 수출입데이터 AI 리더블 형태 전환
- 민간 활용도 높은 데이터의 전향적 개방

# 조달청 업무보고

## 공공조달 개혁

### ▶ 지방정부 단가계약 자율화

- 경기·전북 / 전기전자제품군 대상 시범 실시('26)  
→ 성과분석 및 추가 보완대책 마련 후 지방정부 전체로 확대('27)

### ▶ 발주 비리 등 부작용 최소화

- 규정위반, 부당조건 등 모니터링 및 시정,
- 수의계약 등 계약 정보 실시간 공개,
- 비리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 중소기업 등 정책구매비율 상시 점검 및 공개

### ▶ AI 제품·서비스 조달 활성화

- 계약요건(실적) 완화, AI 전용 심사 트랙 도입, 입찰 가점, 패스트트랙 계약
- AI 사업의 기술평가 비중·변별력 확대, AI 분야 전문평가 도입

### ▶ 공공조달 AX 추진

- 물품가격 조사·분석, 공사원가계산, 조달시장 진입 컨설팅 등에 AI Agent 우선 도입

## AI 조달

## 혁신조달

### ▶ 혁신제품 발굴 및 구매 확대 '30년까지 5천개, 3조원 목표

- 민간·지방정부·전문기관 협업으로 AI, 로봇, 바이오, 기후테크 등 신산업 분야 제품 집중 발굴
- 국내 시범구매·해외 실증사업 확대 및 구매목표 비율 상향 조정

### ▶ 혁신기업의 Scale-Up 지원

- 혁신제품 R&D 지원 확대
- 혁신기업 지원센터를 통한 맞춤형 지원 강화

### ▶ 불공정행위 감시·조사 강화

- 신고-직권조사 병행, 조사거부 과태료 도입, 신고포상금 및 중대위반행위 위약금 증액

### ▶ 건전한 경쟁 유도

- 브로커 입찰 근절(공급확약서 제출, 입찰보증금 부과 등)
- 나라장터 쇼핑물 물품의 2단계 경쟁대상 및 경쟁기업 수 확대
- 과도한 수주 쏠림이 없도록 점유율 관리 강화

## 공정조달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기술선도성장  
균형성장, 공정성장  
뒷받침

# 한국경제 大도약

이재명정부가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그 이행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